

“광주 AI·전남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대선 공약 꼭 지켜야”

尹 당선인, 광주 ‘자유·민주·인권 수도’, 전남 ‘신성장 중심’ 약속 지역민들 숙원 사업 기대...복합쇼핑몰 등 상생 해법 마련도 주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광주·전남 사·도민에게 약속한 지역 대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들이 지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약 실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광주 대선 공약으로 ‘자유·민주·인권의 수도’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추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광주시의 핵심 미래 사업인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기간 광주 AI데이터센터 건립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광주 AI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방문 현장에서 “광주가 대한민국 국·아시아·세계의 AI(인공지능) 거점 도시가 되도록

록저 윤석열이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몰려드는 그런 멋진 도시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 구체적으로 국가 AI집적단지 중심지로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국가 AI데이터센터·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AI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영재고 설립,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지역 최대 현안이자 난제 중 하나인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전남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 대상 지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소상공인 등이 지역 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복합쇼핑몰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 영암 사이 47km 구간에 독일 아우토반 같은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 역시 AI, 미래 자동차, 모터스포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법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전남 핵심공약은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 미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대표 구호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층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무안 국제공항, 관문 공항으로 육성 ▲첨단 의료 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우주·항공 산업, 무안 공항 활성화 등 공약 대부분이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전남에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해 농지 430만평을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면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는 발사체 제작, 조립, 발사 등 모든 과정을 집약적으로 수행하는 첨단 우주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 실행 방안까지 내놨다.

이어 익산, 전주, 남원, 곡성, 구례, 순천 여수 구간 고속철도 속도를 높이고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광역도로망과 광양항, 무안 공항 등 물류·관광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새정부 분야별 정책 및 과제

- 정치 개혁**
 - 평화문 대통령 시대 현실화
 - 청와대 조직 슬림화
 - 재왕적 대통령 폐해 극복
 - 여소아대 입법 환경 극복
- 경제 정책**
 - 민간 주도 ‘공정 혁신경제’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최우선
 -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
 - 국가 재정 관리 재정준칙 도입
- 사업 개혁**
 -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 예산권 제도화 추진
 - 문정부 ‘검찰 개혁’ 상징 공수처 위상 약화 불가피
- 외교 안보**
 - 미국의 전방위적 공조 강화
 - 한미일 안보공조 활성화 무력
 - 사드 추가 배치 추진 등 긴장 고조 불가피
- 남북 관계**
 - 대화의 문 열어 놓되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
 - 판문점선언 계승 ‘불투명’
 - 북한 핵·미사일 질주와 맞물려 ‘경대강’ 대처
- 부동산**
 -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
 -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 임대차3법-재건축부담금-청약제도 ‘손질’
- 교육 개혁**
 - 공정성·다양성 동시 강조
 -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 정시비율 확대 약속
- 노동 환경**
 -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 건설현장 산재 예방 지원
 - 탈원전 정책 폐기
- 복지**
 - 영유아·노인 돌봄 강화
 - 연금개혁 추진
 - 생계급여 확대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주택공급 통합심의제 시행 등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대응 준비 주장

광주·전남이 지역 차원의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통합심의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주도적인 다극 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8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핑’의 보고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내용과 광주전남에의 시사점’을 통해 국토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집중 조망하고 지역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4대 업무 추진과제로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 ▲서민 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분야 지원 ▲한 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초광역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신동훈·김병진 연구진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간 연계·협력 중심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이 이끄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같은 대도시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외곽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인재·자본·일자리’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광역인프라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적기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의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작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 AI 집적단지,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시행에 사전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 불어 넣는다

경쟁력 강화·민관 상생협력 등 3개 분야 중점 추진

광주시는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 ▲건설인 역량 강화와 민관 상생협력 등 3개 분야 11개 세

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또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과 지역제한 일할 등 지방계약제도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와 적극 소통,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우수업체 홍보 세일즈 등을 추진한다.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관련법 위반 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기계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시책 등을 마련했다.

‘건설인 역량강화와 민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건설분야 근로자 기능교육 지원, 건설업체 관계자 법령 교육,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위한 범시민 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우수 건설인 대상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지역특화 빵 산업 육성 박차

1사군 1특화...제품개발·창업 지원

전남도가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빵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 지역 특화 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남 관광객 6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관광지 방문 시 꼭 맛봐야 할 대표 간식인 지역특화 빵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화 빵을 단계적으로 22개 시·군까지 확대하기 위해 ‘1사군 1특화 빵’ 육성을 추진한다. 올해는 목표치를 높여 지난해 말까지 14개소였던 특화 빵 생산 업체 수를 36개소 증가한 50개소까지 늘리고, 지난해 말 기준 106억원이던 매출액을 44억원 증가한 150억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워크숍을 하고, 특화 빵이 없거나 추가 신규제품 개발이 필요한 7개 시·군은 호텔조리제빵과가 있는 전남도립대 및 기업체와 협업체 신제품을 개발한다. 시·군

별로 화순 고인돌빵, 장흥 표고버섯빵, 담양 딸기빵과 죽순빵, 보성 녹차크로플과 감자빵, 쪽파빵, 장성 사과파이, 신안 퍼플소금빵, 목포 목화솜빵 등과 같이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관광명소를 연상하게 하는 이름의 빵을 개발할 계획이다.

대량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식품 제조업으로 등극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3억 원의 시설 설치 또는 설비 구축 사업비를 보조금 60%, 자부담 40% 조건으로 지원한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펼친다. 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에 ‘지역특화 빵 전용관’을 구축, 연말까지 15개 업체, 25개 상품을 입점시켜 명절, MZ세대 각종 기념일 등에 맞춰 다양한 판촉전을 연다. 또 지역 특화빵 품평회, 전시·판촉행사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부분 공모전, 한국메이커리소 등 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하도록 업체당 1000만원을 보조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창이 참 좋다
Lesson Your Life with Sunshang

순창여행

행복한 여행의 시작

자연과 체험이 있는 순창으로 오세요!

MY FAMILY FOLLOW

초봄의 소금강 순창 강천산
경천실 기암단풍

0000 likes MY FAMILY
봄은 백사장과 맑은 물이 흐르는
황기오호 캠핑장

수만년 물결이 만든
장군목 유원지